문화 주권 없는 지방 자치는 허구다

특별기고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박물관 소재 '반출 문화유산'
'제자리 반환' 공약 내놔야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기본 사회'와 '강한 지방 시대'의 완성은 행정·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지방 자치는 지역의 역사적 뿌리와 정신적 자산인 '문화유산'이 유래한 자리로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된다. 다가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수도권 집중의 상징이 되어버린 국립중앙박물관 소재 지역 유산들을 각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문화 주권 확립'을 핵심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중 상당수는 조선총독부가 '고적조사'와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사찰터 등에서 강제로 뜯어내 경복궁과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부당·불법 반출해간 것들이다. 경남 창녕의 가야 고분군에서 나온 찬란한 장신구들, 경북 경주 금관총의 신라 보물들,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 반출된 백제의 정수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국립박물관 등의 수장고와 전시실을 채우고 있다. 이는 일제가 식민 통치의 편의를 위해 자행한 '문화적 수탈'의 연장선이며, 광복 후 8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우리는 그 중앙집권적 유물 관리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3특 5극(3개 특별자치시·도와 5개 메가시티)'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초광역 단위의 자치 시대에 문화유산이 서울에만 묶여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2026년 현재, 국보 367건 중 162건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의 원인은 조선총독부의 적산(敵産)을 물려받은 국립박물관이 광복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유산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리를 떠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김천 갈항사지 동 · 서삼층석탑(왼쪽)과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 사진 출처=국가유산포털

대표적인 불교 유산으로는 김천 갈항사 동·서 삼층석탑, 원주 정토사지 흥법국사탑과 염거화상탑, 원공국사탑, 서산 보원사지의 철조여래좌상, 완주의 봉림사 석탑 등이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끼친 유산들이다.

이에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다. 유산은 그 땅의 역사, 기후, 사람들의 이야기와 결합할 때 비로소 완전한 가치를 발휘한다. 중앙 박물관의 거대한 전시물 중 하나로 전락한 유물들을 이제는 각 지역의 '대표 유산'로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문화 주권은 지역 소멸을 막고 '기본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지역의 대표 유산 한 점이 돌아오는 것은 '박물관 관람객 수 증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관련 문화콘텐츠 산업을 촉발하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문화유산 반환은 가장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지방 발전 전략이다.

셋째, '국가 귀속'이라는 미명하의 중앙 독점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보존 시설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역 반환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 지방 정부들은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국가 소유'라는 폐쇄적 관점에서 벗어나, 소유권은 국가에 두더라도 전시와 관리는 지역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일제강점기 반출 문화유산의 전면적인 고향 귀환'과 이를 뒷받침할 '문화 분권 특별법' 제정을 공약화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지역별 핵심 유물들의 반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다.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한 이유이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해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선 '환지본처'가 답이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다. 지역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이 고향의 품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지방 시대'라는 약속은 현실이 될 것이다. 중앙에 집중된 문화권력을 과감히 내려놓고 지방 문화주권을 세우는 일,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1면에서 이어짐

종교중립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영역의 종교편향 논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특정 종교 행사나 시설을 집중 지원하거나 공공 홍보물에 종교 상징을 노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행정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관광 홍보물과 대중교통 안내판 등에 성당, 예수상 등을 노출하고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장기간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또 전주시 공식 SNS에 다수의 기독교 관련 게시물이 게재돼 있고, 시장의 주요 공식 일정도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행정 전반에서 종교 편향이 반복되자 불교계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행정의 종교중립 의무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특정 종교에 치우친 정책과 홍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불교계 안팎에서는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 대상 종교편향 예방 교육 의무화 △공공 홍보물 종교중립 가이드라인 마련 △종교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점검 체계 구축 △종교편향 민원 신고 및 조정 시스템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의 종교편향 논란이 발생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종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 중립은 특정 종교를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존중하자는 공공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차기 지방정부는 종교편향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과 시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통사찰 전기요금 감면 확대, 국공유지 내 사찰 토지 불하 등 중앙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념 대립이나 지역 개발 경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전통문화와 환경, 공동체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묻는 엄중한 심판대다. 각 후보와 정당은 불교 정책이 전통문화 보존과 사회 통합, 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는 정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

여수령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통도사 찾은 민주당, 불교 현안 청취

5월 3일, 종정 성파 스님 예방
"한국 정신문화 알리는 전환점"
문화유산 · 사찰 규제 개선 논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양산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불교계가 직면한 핵심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 김영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정식·김태년·이재강·이훈기·윤건영·박홍배·박희승 의원 등은 5월 3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를 찾았다.

의원단은 먼저 정변전에서 성파 스님을 예방했다. 의원단은 오는 11월 중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리는 성파 스님의 초대전 및 국제학술세미나에 대해 "한국의 깊은 정신문화와 K-컬처의 진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여 명은 5월 3일 통도사를 방문해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통도사 정변전에서 성파 스님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모습.

성파 스님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으나,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그 뿌리가 되는 전통 미술과 고원한 정신문화를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다"며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국정에 진력함은 물론, 우리 고유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문화 외교에도 정치권이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주지 현덕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진각 스님, 총무국장 진응 스님 등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해 행정적 규제와 재정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안으로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실질적 확대가 논의됐다. 통도사는 "방문객이 폭증해 연간 280만~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 지원금은 과거 낮게 책정됐던 입장료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객 급증으로 주차장 포화, 화장실 등 인프라 부족, 교통 체증이 심각한 만큼 보전금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사하촌(마을)과의 상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화유산 보존 예산의 대폭 삭감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님들은 "문화유산 보수 예산이 반토막 이상 삭감됐다"며 "지역 유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이 제대로 된 보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심각해진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 "사찰 주변과 명승지, 총림 보호 구역을 '예방 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총체적 관리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전통사찰의 전기료 감면 혜택 확대 △사찰 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규제 개선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의원단은 스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교계의 의견을 깊이 소통한 만큼 오늘 의원님들의 방문이 불교 발전이라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축원한다"고 환영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오늘 들려주신 현장의 구체적이고 귀한 말씀들을 정책적으로 잘 새겨듣고, 불교계와 정치권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